

## 강원도

### ▶ 소독실시 규정 위반 축산농가 행정처분

강원도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실시한 지난 10월 19일 춘천시 등 7개 시·군에 도 점검반을 투입하여 일제소독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한 2개 시·군 3개 농가(춘천 1, 홍천 2)를 적발, 행정처분 했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농장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12명을 현지 투입하여 축산농가 95호(우체류 68, 가금류 27)에 대하여 소독실시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한우를 사육하면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1농가와 닭을 사육하면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2농가를 적발, 확인서를 징구 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지시했다.

강원도는 올 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축사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농가가 발생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11월중 도 점검반 집중 투입 등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축산농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충청북도

### ▶ 원산지표시 위반 63개소 적발

충북도내 음식점과 정육점이 수입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박상윤)은 올해 3·4분기(7~9월)동안 원산지표시 위반 54개소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9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10월 5일 밝혔다.

충북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청원군 내수읍의 S음식점은 칠레산과 네덜란드산 돼지고기(삼겹살) 358kg과 미국산 돼지고기 660kg을 구이용과 제육볶음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청주시 흥덕구의 Y축산물(정육점)은 미국산 쇠갈비 49kg과 독일·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205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충북품질관리원은 적발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43개 업소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개 업소는 640만원의 과태료, 쇠고기 이력제 위반 9개소에 대해서는 2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했다.

단속결과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 22건, 배추김치 10건, 쇠고기 2건, 오리고기 2건, 닭고기 1건 등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주요 품목은 돼지고기 6건, 쌀 2건, 배추김치 2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자 처벌 강화

등 개정된 법률내용을 대상 업소에 지도·홍보하고 수입농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

괴산군은 주거밀집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 등 인근에 축사의 입지를 제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통한 청정 괴산군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 괴산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14일 공포한 괴산군 조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학교환경위해정화지역 등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전부제한지역 및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소, 말 등은 300m, 닭, 오리, 젓소는 500m, 돼지, 개는 1,000m 이내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또한 괴산군의 균형방침인 '경쟁우위 농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 축사를 운영 중인 축산농가가 생활환경 보전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인근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소·말 등은 200m, 닭·오리·젓소는 300m, 돼지·개는 500m로 완화하여 기존 축산농가의 축사이전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기존 축산농가의 증·개축은 현행과 같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증·개축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조례제정에 따라 지역의 생활환경보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정 괴산군 이미지에 일조를 할 것으로 괴산군은 전망하고 있다.

▶▶ **가축분뇨 처리시설 용량 3.5배인 4,054톤으로 증가**

충북도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 분뇨 공공정화시설과 공공 자원화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현재보다 3.5배 정도 크게 늘린다.

지난 10월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3,350억원을 들여 도내 가축 분뇨 공공정화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1일 처리 용량을 현재의 1,184톤에서 4,054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는 6개의 가축 분뇨 공공정화시설(1일 처리 용량 690톤)과 5개의 공공 자원화시설(1일 처리 용량 494톤)이 있다.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는 1단계(2012~2015년) 때 790억원, 2단계(2016~2018년) 때 1,117억 원 을, 3단계(2019~2021년) 때 1,443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소와 젓소, 돼지, 개, 닭 사육마리수가 2012년 1,087만마리에서 2021년에는 1,174만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 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또 1일 가축 분뇨 발생량도 2012년 7,977톤에서 2021년에는 8,630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축 분뇨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충북도 통합관리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충북대에 의뢰한 '가축 분뇨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서 2021년 가축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량이 이같이 예측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보은군, 2010 가축방역시책 평가 '최우수' 선정**

보은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가축 방역시책평가'에서 전국 시·군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았다.

2005년 처음 실시한 '가축 방역시책평가'는 가축방역시책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에 대해 특별포상을 실시해 지자체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가축방역대책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8년까지 농식품부가 평가했으나 2009년부터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에서 소 브루셀라병 검사율과 발생 감소율,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닭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방역, 가축혈청검사 실시율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보은군은 돼지열병 예방접종 항체양성률과 닭 조류인플루엔자 및 뉴캐슬병 방역에서 최고점을 비롯해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군은 지난 2008~2011년 전국에 퍼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에서도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연평균 7개월간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했다.

또한 농가 순회교육 및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1,600여 소규모 영세농가를 위해 46개팀 156명의 공동방제단을 통해 매주 소독을 지원하는 등 차단방역에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 검진, 시·구지역 특별방역추진, 도상훈련 시행 등 가축방역 추진에 한발 앞선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축산농가의 전염병 차단과 소득증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경상남도

▶▶ **산청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 확대**

경남 산청군은 읍·면 소재지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던 가축사육 제한지역 범위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부터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개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는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자연마을 등으로부터 1km까지이며, 일부 제한지역과 전부 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전부 제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개발진흥지구 등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으로 지정하고, 축사를 신설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전부 제한지역으로부터 800m 이내 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330㎡(100평)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과 450㎡(136평) 미만의 소·말·젖소·닭·오리·양·염소 등 사육시설, 500㎡(152평) 미만의 사슴 사육시설, 120㎡(36평) 미만의 개 사육시설 등 중소 규모의 축사를 신설해 사육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지정으로 산청군에서는 앞으로 주거 밀집지역 등으로부터 1km 정도의 제한거리 이내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게 됐다.

## 전라남도

### ▶▶ 닭·오리농장 등급별 관리로 사육시설 개선 등 적극 유도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시의 선제적 방역대책'의 강력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오리 계열회사 및 올해 고병원성 시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주시와 영암군 방역담당자들에게 사육시설 개선 등 친환경 경축산 실현을 당부했다.

지난 10월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1월 도내에서 발생한 23건의 고병원성 시중 21건이 오리농가에서 집중 발생했다. 발생 원인 분석 결과 오리의 경우 사육환경이 열악해 가축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장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상시 방역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별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전남도와 계열회사에서는 농장 사육환경 등급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닭, 오리농가 사육환경에 따른 등급별 조사를 실시, 집중관리가 필요한 보완, 사육제한, 이전대상 농가들에 대해 시설개선 등 사육환경 개선권고를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에서 해당 농가에 대해 병아리 공급을 제한토록 조치했다.

또한 농장의 상시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일시입식 일시출해(올인 올아웃)를 준수해 적정 순환사육으로 가축 재입식시 휴식기동안 축사를 건조시켜 소독 후 재입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특히 시·군과 계열회사간 병아리 입식계획을 상호 공유해 시·군 가축방역관이 농장 소독여부를 확인해 소독을 실시한 농가에 한해 병아리를 공급토록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은 전국 오리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집산지이고 축산농가 생산액도 한우에 이어 2위를 점유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선제적 방역대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내년 4월까지 도, 축산위생사업소, 각 시·군 등 26개소에 '시·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라북도

### ▶▶ 익산시-싱가포르, 투자 협약 체결

익산시가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외국 투자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익산시는 싱가포르 닭 가공업체인 기송그룹과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송그룹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단지내 약 16,500㎡ 규모의 현대식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건립한다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익산시와 투자협약을 한 기송그룹은 싱가포르의 대표적 가금류(닭) 가공업체로 가금류 생산 및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이한수 익산시장은 "최근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의 익산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에 보다 확실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해외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 ▶ 수입산 닭고기 불법유통업자 덮미



수입 닭고기 등을 불법으로 사들여 무허가로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덴마크산 닭고기와 부산물 등을 유통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입해 이를 닭고기 판매업소 등에 팔아넘긴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이모(4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0월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제주시 이도동에 무허가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덴마크, 브라질, 미국산 등 수입 닭고기 및 닭날개, 닭발 등을 싼값에 공급받아 제주시 일대에 쿽서비스를 이용, 은밀하게 공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 업소에서 냉동 보관 중인 200kg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유통 규모 및 공급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 제주검역검사소, 축산물 수출업체 위생점검 실시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제주검역검사소는 11월 1일부터 제주지역 축산물 수출업체 대상으로 검역시행장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월 31일 밝

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축산물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된 도축장 3곳과 돼지고기 육가공장 9곳, 닭고기 육가공장 3곳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검역검사소는 “최근 제주지역 돼지고기 부산물이 태국, 베트남, 홍콩 등으로 수출이 재개되고 있으며, 닭고기는 이미 베트남 수출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도 수출을 추진함에 따라 수출업체의 위생관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도내 사육 가축 안전

도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가축들은 슈퍼박테리아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질병 치료시 의료된 가축 가검물 931건을 대상으로 세균검사와 함께 축산 항생제 내성균을 모니터링한 결과 슈퍼박테리아가 단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난 10월 28일 밝혔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축산물은 물론 가축질병 치료시 의뢰되는 가검물을 대상으로 축산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실시해 농가가 질병 치료에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축산분야에서 항생제는 가축의 질병 치료와 예방 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가 오·남용되면서 지금까지 개발된 항생제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슈퍼박테리아는 현존하는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세균으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등이 있다. 